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홍민(동국대학교)

1. 서론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보는 화두 중 하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재분배를 '심장'으로 하는 계획경제의 물질(物的) 순환체계가 마비됨에 따라 시장교환이 과거 은폐된 공간으로부터 생계공간으로 전면화된 것이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의 개설은 시장교환의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압력에 대한 국가의 반응이자 현실적 타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장 급기의 낡은 장막 뒤로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시장교환의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을 인정하고 국가 통제 안에서 관리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계획경제의 미약한 동력조차 시장교환의 수혈을 통해 힘겹게 가동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최대한 제도영역 안에서 풀어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북한사회의 변화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시장

(marketplace)'의 존재 여부나 주민들 사이에 일상화된 거래행위, 국가의 법적 허용 여부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사회와 시장교환이 갖는 관계, 사회가 시장을 수용하는 방식, 시장이 일상에서 전유(appropriation)되는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장교환이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정치(精緻)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시장적 조정과 관료적 조정의 이분법 속에서 어느 하나의 우위를 선택하는 설명 방식보다는 이 둘의 공존과 결합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를 개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진행되는 사회적 상호작용들의 총체로 봤을 때, ‘사회적 관계’란 그러한 상호작용의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뜻한다.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는 상호작용이란 그 사회적 관계에 특정한 교환의 질서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환의 질서란 한 사회가 물질적 재화를 생산·재분배하고 정치적 상징과 지위를 생성·재분배하는 질서이자, 이것을 담론으로 통합해 내는 기제를 뜻한다. 즉, 한 사회의 지배적인 교환질서에는 정치적 지배논리와 물질적 재분배논리 그리고 도덕담론, 생존논리 등이 내장되어 있으며, 그것이 총체화되어 일종의 정치경제적 통합의 매커니즘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와 시장교환에 대한 이해 역시 이러한 기존의 지배적 교환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배적인 교환질서가 시장교환과 갖는 관계이다. 이들이 갈등·대립하는 방식 또는 공존·결합하는 방식, 즉 기존 교환질서 내부의 사회적 관계에서 시장교환이 수용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기존에 북한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교환형태를 분석하였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응축(condensation)되어 있는 계획·재분배체계에 주

목하였다. 계획-재분배체제는 물질적 생산-재분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계의 재분배가 맞물려 있는 체계로서 궁극적으로 국가지배의 도덕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재분배체제가 정초해 놓은 사회적 관계와 1990년대 시장교환이 어떻게 결합해 있는지를 ‘관계자본’의 교환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2. 사회적 교환형태와 계획-재분배체계

1) 교환형태와 정치경제적 통합메커니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¹⁾는 일정한 교환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떠한 교환의 동기와 형식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 있다. 이처럼 “교환은 관계들 속에 종속되어 있는 것”²⁾이며, 특정 집단과 공동체, 국가 등은 모두 지배적인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런 교환의 내용물은 물질적인 것, 명예나 지위, 충성과 정치적 보상 등 다양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 관계는 일정한 교환질서를 통해 형성되는

1) 게오르그 짐멜 저, 김덕영 외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서울: 새물결, 2005), 282쪽.

2) 베아트리스 데코사 저, 신은영 역, 『노동·교환·기술』(서울: 동문선, 1999), 80쪽.

3) 국가조직, 경제조직, 군대조직, 노동조직 등과 같이 비교적 고정적인 대상, 즉 특정한 사회체들은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객관적 구조물로 응축되거나 결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역시 사회적 관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관철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관계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 집단 및 공동체 그리고 국가 등이 기반하고 있는 교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시장(market)’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호혜(reciprocity)’는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증여(gift)-답례(count-gift)라는 호혜적 교환을 일컫는다. 일종의 ‘선물의 정신’⁴⁾ 또는 ‘선물의 경제(gift economy)’ 원리가 내장되어 있다. 상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증여와 답례는 등가일 필요도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지만, 답례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⁵⁾ 선물을 주고받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이들 간의 호혜에 입각한 안정을 부여한다. 하지만 답례에 응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공동체의 구속이 강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갖는다. 또 증여와 답례 사이에 존재하는 부등가 교환은 일종의 ‘선물의 정신’을 통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위장되며, 나아가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호혜적인 선물의 교환관계로 포장함으로써 지배논리를 은폐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4)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선물은 외관상으로는 자유롭고 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제적이며 타산적인 것”이라고 본다. 선의(善意)의 증여로 포장된 ‘선물의 정신’에는 선물 제공의 의무, 받아야 하는 의무, 답례해야 하는 의무 등이 내장되어 사람과 사람을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물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때로는 결속력과 우정이 유지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선물이 자신의 세 가지 경제 체계 모델, 즉 상호호혜, 재분배, 시장 중 첫 번째 모형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반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폴라니는 호혜성을 의례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무에 기초한 제화와 용역의 순환이라고 보았다. 마르셀 모스 저, 이상률 역, 『증여론』(서울: 한길사, 2002); 나탈리 지몬 데이비스 저, 김복미 역, 『선물의 역사』(서울: 서해문집, 2004); 칼 폴라니 저, 박현수 역,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서울: 민음사, 1991).

5)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 권기돈 역, 『탐구2』(서울: 새물결, 1998), 271쪽.

둘째, ‘재분배(redistribution)’는 부족적 공동체보다 확장된 국가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교환의 관계이다. 국가는 많은 수취를 위해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 생산물을 중앙으로 이전하고 이것을 재분배한다. 재분배에는 이른바 수탈-재분배라는 교환의 과정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착취적 지배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호혜적인 관계로 가장된다. 이를 통해 국가는 도덕적 선(유교의 ‘治世者의 德’), 이성적인 실체, 보호자 등의 위치에 서게 되고 주민들은 선정(善政)과 보호의 대가로 ‘충성’과 ‘노동’으로 보답하는 교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재분배의 교환관계 속에는 물질적 순환과 정치적 지배관계가 맞물려 있다.⁶⁾

셋째, ‘시장(market)’은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른 교환을 일컫는다. 서로 등가라고 생각했을 때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환에는 잉여가치, 즉 자본이 발생한다. 등가를 가장한 부등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⁷⁾ 시장교환 관계는 국가를 넘어 합리적 계산자인 개인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이 시장교환은 사유권을 보장하고 사유권 보장을 통해 과세(수탈)를 채기는 국가를 전제하며, 시장교환은 순수한 계약적 관계에 입각해 있는 것이

6) 지속적인 수취를 위해 수취자는 피수취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원형이다. 국가는 계속해서 더욱 많이 수탈하기 위해서 재분배에 의해 토지와 노동력의 재생을 보증하고 관개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한다. 그 결과 국가는 수탈기관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농민이 영주의 보호에 대한 답례(의무)로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생각하며, 상인도 교환을 보호해 준 답례로 세금을 낸다. 그 때문에 국가는 초계급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표상된다. 가라타니 고진 저, 송태욱 역,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서울: 한길사, 2005), 43쪽.

7) 가라타니 고진 저, 송태욱 역, 『일본 정신의 기원 - 언어, 국가, 대의제, 그리고 통화』(서울: 이매진, 2003), 43쪽.

아니라 호혜와 재분배와 같은 교환의 원리들을 기반으로 이들 형태들과 공존 및 결합해서 작동한다.⁸⁾ 어느 사회에도 순수한 시장교환의 형태만 존재하는 사회는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교환 형태들은 한 사회에서 갖는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나 결합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 공존한다. 어느 하나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세 가지 교환 방식은 개인과 공동체, 국가 내부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교환의 실천들이 ‘제도적 응축’을 통해 나타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적 응축’이란 공식적인 제도나 법적 측면을 비롯해 비공식적인 정치적·경제적 관행과 전통적 유습, 사회문화적 정서 등이 교환의 형태 속에 총체적으로 개입해 있음을 뜻한다.

사회주의체제의 정치경제적 통합메커니즘은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호혜적 교환은 최고지도자(국가)와 인민 사이의 증여와 답례의 과정으로 대표된다. 인민에 대한 ‘배품’(사회보장)이 증여라면 인민이 이에 보답하는 것은 ‘답례’(노동)가 되는 것이다. 이 배품과 보답의 관계는 표면상으로 정당한 교환의 관계로 담론화된다. 지도자에 대한 숭배는 인민들이 지도자, 당 그리고 국가에 해야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담론의 전파를 통해 이루어졌다. 혁명전통이 지도자로 인격화되고, 국가가 필요 물품과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인민들은 그 답례로 노동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호혜로 위장된 지배의 논리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재분배의 교환은 자원과 권위의 집중을 통한 물질적·정치적 재분배를 뜻한다. 물질적 재분배는 계획경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계획경제

8) 가라타니 고진 저,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증언』(서울: 도서출판 b, 2006), 119~120쪽.

는 중앙기구에 모든 현물재화의 강제적 이전을 전제하며, 다시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의 현물경제는 이 재분배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데, 여기에 정치적 재분배가 맞물리게 된다. 왜냐하면 계획경제는 현물신호를 매기고 중재하며 통제하는 ‘중심’, 즉 중앙권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원 투입 자체가 크고 힘 있는 특정 부문과 산업을 중심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이 위계화에 따라 방대한 관료들 역시 위계적 고리로 연결된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재분배도 역시 맞물려 돌아간다. 재분배 체계를 통해 지배 권력의 의도가 쉽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시장교환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이 호혜와 재분배 교환방식이 물질적 보장 기능과 재분배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그 부분을 대체·보완을 하는 형태로 은폐된 공간에서 존재해 왔다. 여기서 ‘대체’나 ‘보완’이란 시장교환이 나머지 교환 방식을 압도하거나 독자적인 교환체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방식이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문혀(embedded)’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계획경제의 불확실성을 봉합하고 억제된 인민 소비욕구의 틈새에서 은폐된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결국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형태는 물질적 이전과 분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덕담론과 결합되어 있으며, 물질적 재분배는 관료세계의 위계를 통해 수행되면서 정치적 재분배와도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 이들 세 교환형태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은 ‘계획-재분배체계’를 통해서이다. ‘계획-재분배체계’는 전체 자원과 생산물에 대한 중앙 집중과 독점적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면서, 한편으로 그러한 집중과 독점을 통해 정치적 지배

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다. 국가적 수탈-재분배를 도덕담론을 통해 호혜적 교환으로 정당화하고 권위 독점을 통해 관료적 지위를 배분하는 메커니즘이 계획-재분배체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2) 계획-재분배체계와 교환질서의 전유

‘계획-재분배체계’란 표면적으로는 계획화와 관료들의 계획집행, 인민들의 노동과 생산, 이로부터 형성된 자원과 자금이 다음의 계획과 축적을 위해 재분배되는 순환구조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다양한 정치적 논리와 의도, 각 행위자들의 생존논리 등이 개입하게 된다. 자원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계획을 관장하는 초법적 권위를 통해 수령은 관료와 인민을 상대로 ‘배품’의 증여담론을 유포하고 통치를 정당화한다. 이것은 ‘호혜’를 가장한 수탈을 내장하고 있다. 수령과 국가는 계획-재분배체계를 통해 자원의 독점은 물론 이것을 집행하는 관료들에 대한 정치적 권한과 지위의 재분배 역시 독점한다. 결국 계획-재분배체계를 기초로 호혜를 위장한 통치와 정치적 지배, 물질적 독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재분배체계에는 위에서 언급한 교환형태들이 응축되어 있다. 외부와 일정하게 고립된 ‘자립경제’ 속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수령의 은덕)과 인민의 노동이 교환되는 방식은 ‘호혜’로 가장되며, 전체 생산물 중앙 집중과 독점적 재분배라는 계획경제 시스템은 수탈을 통한 ‘재분배’라는 교환을 대표한다. 이러한 물질적 재분배에는 정치적 지배와 통합의 원리들이 함께 작동한다. 수령의 은덕과 노동이 교환되는 속에는 정치적 지배를 호혜적 관계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며, 계획을 집행하는 거대한 관료체계는 수령의 정치적 재분

배에 종속되어 있다.

시장교환 역시 계획-재분배체계 내부에 은폐되어 있었다. ① 국가 축적체계, ② 사회적 분배의 위계 구조, ③ 공급부족의 경제 등을 통해 1990년대 이전까지 시장교환의 존재방식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공업 우선노선을 기축(機軸)으로 하는 축적체계는 자원 통제와 소비 억제제를 통해 작동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교환은 국가 상업망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은 창구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위계화된 사회적 분배구조⁹⁾와 1970년대 들어 지속된 식량생산의 정체 국면은 농민시장을 위시한 장터(marketplace)가 미미하지만 시장교환의 장소로 생명력을 발휘하게끔 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부족 현상은 계획경제의 작동을 더욱 정치화(政治化)했는데, 부족을 해소하고 계획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과 연출, 호혜 관계가 번성했다. 이들은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교환(exchange)’으로서 자체의 은폐된 가격신호를 만들어냈다. 생산수단 및 자재의 거래는 불법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공공연한 흥정과 교섭의 대상이 됐고 ‘교환’을 위한 가격이 그들 사이에서 작동했다.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계획-재분배체계를 통한 통합 메커니즘 내부에는 또 다른 교환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다. 수령, 관료, 인민 등의 각 행위자들이 호혜, 재분배, 시장 등의 교환질서를 자신의 생존논리에 맞게 재전유하면서 발달시킨 교환논리들이다. 우선 수령은 상층 관료들에 대한 특권적인 (정치적·물질적) 분배를 통해 충성을

9) 북한사회의 직업별 보수구조 자체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직급 및 계층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사회적 혜택, 정치적 지위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활용 및 점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불평등 양상은 커진다.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관해서는,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45~55쪽.

확보하는 한편, ‘수령경제’¹⁰⁾로의 특수한 자원 축적을 이루어냈다. 이 자원들은 정권 보존 차원에서 최고지도자와 상층관료들에게 독점적으로 전유된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이다. 상층관료들이 헌사(獻詞)하는 충성과 수령의 제공하는 정치자본이 교환되면서 이들 사이에는 호혜적 공생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물질적 재분배체계를 독점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둘째, 관료세계 내에서는 호혜를 관료적 생존논리로 둔갑시켰다. 계획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융합하기 위한 생존방식으로 호혜를 담합과 연줄, 공모의 사술로 활용하는 것이다. 비공식적 연줄을 통해 수완을 만들어내는 그들끼리의 ‘속삭임(whispers)’이 일종의 호혜적 교환 관계를 만든 것이다. 이런 관계들은 계획체계 내부에서 끊임없이 계획을 임기응변으로 융합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그것을 파기(scraping)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¹¹⁾ 또한 중공업을 중심으로 위계화된 산업구조

10) ‘수령경제’의 개념은 인민경제와 구분된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지닌 자기완결적인 경제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 논의들에서 당경제, 군사경제, 인민경제 등을 구분하고 수령경제를 폐쇄적인 ‘궁정경제’ 형태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전체 자원과 자금이 분배되는 비중의 측면에서 편의상 구분이 가능할지 모르나 호혜와 계획-재분배의 교환 원리를 기초로 한 전체적인 물질 자원의 순환 차원에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도 역시 맞물려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수령경제’ 개념은 국내 전체 생산과 공식·비공식적인 대외교역으로부터 수령이 통치에 필요한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로와 사용의 정치적 맥락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수령경제’는 관료집단의 충성을 관리하는 선물비용을 비롯해 계획경제의 ‘걸린 고리’를 현지도도를 통해 돌파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수령 개인의 통치자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화벌이와 국내에서 생산된 자원과 자금을 당·정·군 기구와 관료적 과정을 통해 수령의 통치자금으로 흡혈하는 일정한 자금경로이다.

11) 계획경제의 관료적 과정은 물질 이동의 행정적 처리만이 아닌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의 교환과정이기도 하다. 북한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축적체계는 산

는 정치적 재분배 구조와 연동되어 있었다. 힘 있고 규모 있는 곳으로 부터 물질적 재분배가 차별화되고 그 차별은 곧 정치적 지위와 힘의 차이를 의미한다.¹²⁾ 관료들은 산업적 위계에 따른 정치적 힘의 분포에 따라 정치적 지위와 연줄을 만들고 위와 아래로 충성과 복종을 교환하는 공생의 질서를 만들어왔다.

셋째, 말단 관료들은 일상에서 주민들과의 대면 속에서 교환관계를 만들어낸다. 현장 관료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주민들의 일상에 약탈적으로 기식(壽食)하면서 교환관계를 갖는다. 생산관료들은 작업장에서 권위적으로 군림하거나 노동을 규율하는 수단으로 소소한 분배의 특혜와 편의 제공을 통해 복종을 교환한다. 인민들은 노동 이외의 어떠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 삶의 조건 속에서 소박한 일탈과 노동을 그들만의 ‘제의(祭儀)’로 재전유(再專有)하는 ‘일상의 정치’를 펼치게 된다.¹³⁾ 이 과정에서 연출된 충성과 편의를 교환한다. 여기

업구조를 일정한 위계적인 자원배분 구조로 만들었고, 관료적 과정은 위계화된 자원배분을 교동정리하는 수많은 관료적 담합과 흥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관료들이 행하는 정치자본의 유지와 확장은 계획경제의 문제를 수습하는 관료적 상호호혜와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관료 간의 담합과 공생의 질서를 의미했다. 이러한 북한의 공식적인 관료담합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관료문화의 비공식적 관습과 관행, 관료들의 행위, 의례를 ‘관료적 드라마’(bureaucratic drama)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30~133쪽 참조.

- 12) 위계적인 산업구조에서 야기되는 자원 재분배의 차별화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연줄’의 경쟁을 심화시켰는데, 현존했던 사회주의체제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제부문 간 자원배분 문제를 둘러싼 ‘본위주의’와 세력관계, 정치적 영향력은 선형부문과 거대기업체를 중심으로 여타 부문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관료적 위신과 위세가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알렉 노브 저, 대안체제연구회 역,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서울: 백의, 2001), 217쪽;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서울: 해남, 2002), 60~61쪽.

에 관료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교환논리가 자리한다.

결국 북한사회에서 계획-재분배체제는 자원의 독점과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자 지배를 호혜의 도덕담론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수령, 관료, 인민들은 각각 자신의 생존논리 맞게 교환질서를 재전유해 내는 관계전략을 구사해왔다. 계획-재분배체제가 구성하는 거시적 교환관계와 자신의 생존논리에 맞게 교환질서를 재전유해 내는 북한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담론, 전략, 실천 등이 맞물려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최고지도자를 포함 지도집단과 관료, 인민 등이 각각 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양한 의식과 전략 속에서 행위하며, 그것이 일정한 지배적 교환질서 속에서 사회적 관계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실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계획-재분배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교환질서 재전유와 사회적 관계를 ‘관계자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관계자본’은 계획-재분배체제가 규정하는 교환질서 내부에서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이다. 이들 자본은 개인이 고립된 속에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에 연루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획득된다는 점에서 ‘관계자본’이다.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의 종류와 축적 및 활용 정도에 따라 자신의 생존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관계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관계자본’은 이들의

13) 주민이 행하는 ‘일상의 정치’는 정치적·제도적 통제에 대한 생존전략, 노동과정에 대한 저항과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홍민, “북한체제의 ‘도덕경제’적 성격과 변화 동학,” 『진보평론』, 24호(2005년 여름), 61~70쪽.

사회적 관계를 일정한 관계자본 교환구조에 구속하는 한편 이들이 서로 공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시킨다.

3. ‘관계자본’의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1) ‘관계자본’의 개념과 북한사회 적용

본 논문이 개념화한 ‘관계자본(relational capital)’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을 관통하는 사회적 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데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resource)을 의미한다. 이들 자본들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총칭하여 ‘관계자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개념의 ‘관계자본’은 어느 사회에나 적용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설명에서는 생존, 자기보존, 입신, 금전적 이익,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하며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총칭한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에 따르면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은 분화된 위치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¹⁵⁾ 개인들은 이 분화된 위치들 속에

14) 여기서 말하는 ‘자본(capital)’의 뜻은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사회 내 계급 불평등과 그것의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화 한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 등을 말할 때 사용한 자본의 개념이다. 본 논문은 부르디외가 개념화한 네 개의 자본의 개념을 원용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사회적 관계에 부합하는 ‘자본’의 개념 틀로 재구성했다. 기존의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에 정치자본과 관료자본을 추가했다. 이들을 총칭하여 본 논문은 ‘관계자본’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15) Bourdieu, Pierre,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15.

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 위치는 개인들이 소유한 특정한 자본의 종류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의 장(場, champ, field)이 요구하는 자본의 종류에 따라 분화된다. 사회적 공간은 제도화된 권력 수단인 다양한 자본의 소유로 위계질서화된 공간인 것이다. 그는 기존에 자본(capital)을 의미하던 물질적 소유 중심의 ‘경제자본(economy capital)’에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을 추가했다.¹⁶⁾ 이들 자본의 개인적인 축적 정도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의 장이 원하는 자본의 종류에 따라 개인들은 사회 공간 내에서 분화된 위치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¹⁷⁾

결국 ‘자본’의 개념을 경제적 의미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시키는 한편, 그에게 자본은 행위자가 사회적 공간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위신, 또는 자기보존과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종의 물질적 소유와

16) ‘자본’ 개념을 이와 같이 확대시킨 것에 대해 비판도 있다. 우선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자본의 개념은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형식들의 조건적 연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부르디외는 의도적으로 이 자본 개념을 ‘자원’의 특성으로 변형시킨다. 따라서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은 사회적 유통 및 시장 관계만을 문제 삼게 되고, 자본주의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서 나오는 착취관계(가치이론)는 사상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부르디외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각각의 자본은 그 존재 양태와 구성, 축적, 교환 방식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구현 방식은 다르다. 따라서 단순한 자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형식으로만 해석하기 힘들었던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과 재생산성을 오히려 다양한 자본을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유’를 단순히 물질적 성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가치의 소유도 일종의 자본으로 보고 있는 점은 사회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17) 부르디외가 분류한 ‘자본들’은 사회 내 계급 불평등의 재생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시각이 경제적 자본에 결정적 역할을 주고 있는데 대해, 불평등의 재생산은 문화, 상징, 교육, 사회적 연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개입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설명 속에서 개념화되었다.

함께 그 물질적 소유를 가능하게 하거나 유지하는 데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도화된 가치의 소유’가 갖는 의미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자본은 축적·보유·교환 방식 등에 따라 그 존재 및 구현 방식이 다르며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우선 ‘경제자본(economy capital)’은 직접 화폐로 전환 가능하고 ‘소유권’의 형식으로 제도화된다. 따라서 이는 재산, 소득 등과 같은 화폐를 매개로 한 모든 물질 자원 형태를 포괄한다. 물질적인 재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의 변화가 매우 유동적이다. 잃고 획득하는 것이 분명하며 계산 가능한 자본이다. 또한 다른 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근간이 되거나 그것의 목표가 된다. 현존했던 사회주의체제와 북한의 경우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소유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자본의 위상이나 영향력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경제자본은 북한에서 어느 계층에게나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으로 부상했으며 다른 자본과의 연관성도 높아졌다. 국가가 전반적인 공급능력을 상실하면서 물질적 재화의 획득은 생계 차원에서 개인에게 보다 중요해졌다. 또 생계 차원을 넘어 이윤을 확보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활동의 경로도 폭이 넓어졌다. 이런 상황은 경제자본이 사회적 교환과 분화에서 갖는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경제자본의 교환이 과거 법적, 규범적 금기 속에서 존재했다면 지금은 일정하게 ‘실리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사회적 목표와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둘째,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일정 조건에서 다른 자본들로 전

환이 가능하며, 주로 학위의 형식으로 제도화된다. 크게 ‘체화된’, ‘객관화된’,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체화된(incorporate) 문화자본’은 가정환경, 가정교육으로 형성된 아비투스(habitus: 성향체계)처럼 내면화된 문화적 능력을 말한다. ‘객관화된(objective) 문화자본’은 소장하고 있는 그림과 골동품 등 실재적인 문화의 물질적 소유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화된(institutional) 문화자본’은 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학력과 같이 제도화된 것들을 지칭한다.¹⁹⁾

문화자본은 경제자본과 달리 자본축적에 긴 시간이 요구되고 계산이 불가능하며 한번 축적되면 장기성을 갖는다. 가령 대표적인 문화자본에 속하는 학력의 경우 제도적인 인증의 긴 과정이 필요하고 가정환경과 같은 정서적인 차원도 작용하며, 그것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경제자본의 혜택 역시 관계한다. 즉, 그가 속한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본에 따라 문화자본의 질적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문화자본은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의 소유와 관련된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반면, 체화된 문화자본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출신성분’²⁰⁾으로 대표되는 가계(家系)의

18) 경제자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0년대 들어와 물질적 분배나 혜택의 측면에서 불평등은 ‘생존’과 결부되어 연령별, 성별(남여), 지역별(동서) 등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계층에 따라 시장 접근의 기회 역시 다르다는 점은 경제자본이 사회 분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뜻한다.

19) Bourdieu, Pierre and Wacquant, Loic J. D.,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119.

20) 통칭해서 ‘성분’이라고 부른다.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출신계층’, 직업에 의해 결정되는 ‘출신성분’, 현재의 직업과 지위를 가리키는 ‘사회성분’이다.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출신성분에 대한 구분작업을 수차례 진행해 왔다. 1958~1960년 중앙당 집중지도

정치적 위상에 따라 체화된 문화자본과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능력 및 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 그 가계와 후손들은 문화자본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출신성분과 가계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좋을 경우 문화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신분상승과 더불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²¹⁾

물론 소수의 특권적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편차 없이 일정한 수준에서 학력자본의 배분을 받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와 같이 물질적 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의 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물질적 능력과 관계가 긴밀해졌다.²²⁾ 교육이 물질적 능력이 있어야만

사업, 1964년 4월~1969년 주민등록사업 등을 토대로 1971년 2월 전 주민을 3계층(핵심, 동요, 적대) 51개 부류로 분류,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핵심계층은 당·정·군의 고위간부로 진출하며 각종 사회적 특혜를 받는다. 반면 적대계층은 입당, 진학, 직업배치 등 모든 사회활동에서 제약을 받는다. 사실상 출신성분은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융통성 있는 성분정책을 김일성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강조해 오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의 지시로 일부 행정 및 경제부문 간부인사에 한해 성분완화정책이 시도되기도 했다. 1993년부터는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일환으로 “복잡한 군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성분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그만큼 사회통합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담론으로도 볼 수 있다.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33~37쪽.

- 21) 지배적인 교육체계는 사실상 상당한 상징폭력의 독점권을 의미한다. 사회구조체 내부에서 교육체계는 지배문화를 재생산하면서 권력관계까지 재생산한다. 교육체계는 지배문화가 구조화한 분류와 도식을 습득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자본, 특히 교육체계를 통한 계급 불평등의 재생산에 대해서는, 피에르 부르디외·장 끌로드 파세롱 저, 이상호 역,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서울: 동문선, 2000) 참조.
- 22) 공식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적 혜택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난 속에서 교육은 공공연하게 물질적 능력의 차이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교사의 월급은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모

가능해진 것이다. 또 교육 기회의 균등한 배분이라는 체제의 교육이념에도 불구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교육기회는 불평등한 배분 형태를 아직도 띠고 있으며 특권화된 계급을 재생산해 왔다.²³⁾ 또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출신 가계의 직업에 따라서도 문화자본의 축적 조건은 차이가 난다.

셋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제도화되었던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던 상호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²⁴⁾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원을 동원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범위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 이 자본은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만들고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한 산물이다. 즉,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

아서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커졌고 장사를 해서 이 교육비를 마련하는 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탈북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에 대해서는, 한만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북한에서 살다 온 16인의 생생한 교육체험기』(서울: 우리교육, 1999), 173, 197, 244쪽 참조. 2000년대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부담과 소득격차에 따른 출석률 차이, 장터활동을 통한 교육비 부담 가중, 교원의 위상 변화 등에 대해서는, 좋은 벗들 편,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서울: 정통출판, 2006), 120~127쪽.

23) 사실상 간부들 자식들이 대학입학에서 특혜를 누려왔으며, 간부 자식들은 간부자식들끼리 결혼시키는 것은 보통이다. 이들은 일종의 ‘토대’라는 부계(父系)의 간부직을 배경으로 교육 및 다양한 국가적 특혜를 통해 특권적 세습을 관철시켜 왔다. 이에 대해서는, 서재진·조한범·장경섭·유필무,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서울: 생각의나무, 1999), 169~175쪽.

24) Bourdieu, Pierre, “The Form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1986), p.248.

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²⁵⁾

사회자본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적(public)인 삶에서는 다양한 자원 획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며, 사적(private)인 삶에서는 다양한 인간적 유대를 통한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서 사회자본의 활용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과거 사회자본이 경제영역에서는 연결망의 형태로 각종 계획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인간적 관계를 의미했고, 정치적으로는 지위를 확보하는 연줄을 의미했으며,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유대를 의미했다면, 1990년대에 사회자본은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 수준을 설명하는 데 더욱 적합한 개념이 되었다.

넷째,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은 명예와 인정(認定)에 관련된 의식들 전체(의례)에 상응한다. 상징자본은 다른 세 형태의 자본 소유와 그에 대한 승인이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신용과 권위에 해당한다.²⁶⁾ 의식, 명예, 위신이 상징적 효과로 사회적 관계구성에 영향을 줄 때 이들은 상징자본이 될 수 있다. 상징자본은 다른 자본의 순기능적 사용을 승인하거나 임의적 사회관계를 정당한 관계로 변형시키는, 보이지 않는 상징적 힘을 갖고 있다.²⁷⁾

결국 상징자본은 경제자본+문화자본+사회자본의 결과로서 ‘상징적으로 부여되는 권위’를 의미한다.²⁸⁾ 상징자본은 특히 지배와 피지

25) *ibid.*, p.249.

26) 파트리스 보네워츠 저·문경자 역,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서울: 동문선, 2000), 65쪽.

27) 현택수, “아비튀스와 상징폭력의 사회비판이론,” 현택수 외 저,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1998), 110쪽.

28) 정선기, “생활양식과 계급적 취향-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적 재생산에 관하

배 관계에서 설명력을 발휘하는 개념이다. 지배자는 피지배자로부터 많은 상징자본을 획득할수록 지배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여기서 상징자본은 바로 통치자의 입장에서 ‘충성과 지지’의 획득을 의미한다. 피지배자로부터 얻는 충성과 지지는 곧 지배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기초가 된다. 상징자본을 통해 지배자는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고 정치자본·문화자본을 제도화된 과정을 통해 관료와 인민들에게 분배한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상징자본은 수령과 관료, 인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수령은 관료와 인민으로부터 충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상징적·실천적 작업을 수행한다. 가령 선물(gift), 헌신(service), 도움(assistance), 관심(attention), 돌봄(kindness) 등의 상징적 실천과 덕행을 행하는 지도자를 상징화시키고, 국가적 의례나 축제들을 통한 엄숙한 정치적 상징을 통해서도 국가와 수령을 신성화한다.²⁹⁾ 이러한 상징적 작업을 통해 수령의 권위와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또 충성과 지지의 보상으로 수령은 관료들에게는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점유·활용권을, 인민들에게는 사회보장이라는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교환관계 속에서 상징자본은 끊임없이 확대·강화되는 성격을 갖는다.³⁰⁾

한편 부르디외는 사회주의사회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자본을 추가

여.” 현택수 외 저, 『문화와 권력』, 64쪽.

29) Bourdieu, Pierre, *Practice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68.

30) 그러나 1990년대 이 상징자본을 획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국가의 물질적 재분배 능력이 쇠퇴함에 따라 그 교환의 대상도 축소되었다. 소수 특권화 된 관료들에게 — 특수한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단인 — 공공 재화의 점유·활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로 특수한 이해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상징자본을 유지하고 있다.

한다. 바로 ‘정치자본’이다. ‘정치자본(political capital)’이란 관료적 지위와 함께 그것을 보유한 자들에게 ‘공공적 재화(관료들의 공공재화 점유·활용)와 서비스(주택, 자동차, 병원, 학교 등)의 전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³¹⁾ 여기서 ‘보장’이란 공식적인 전유의 허용도 있지만 비공식적 방식으로 전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집단적 자원의 세습 재산화(patrimonialization of collective resources)’는 사회주의체제의 관료체제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이런 세습은 가족적 관계들의 망을 통해서 전수되기 쉽다.³²⁾

부르디외는 다른 자본들의 축적이 다소간 완벽하게 통제될 때 정치자본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분화 원칙이 된다고 본다.³³⁾ 물론 정치자본이 경제, 사회, 문화, 상징자본 등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자본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현존했던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정치자본이 기타 자본들을 압도하거나 최소한 다른 자본들을 유인하는 핵심적 자본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물질적 재화의 소유 유무(有無)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점유·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더 중요했다.³⁴⁾

북한의 경우 관료적 특권은 재분배의 과정 중에서 행사되는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직위를 이용한 정치자본의 경제자본화가 사실상 보다 중요하다. 정치자본의 경제자본화라는 것은 구소련의 체제 이행 과정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노멘클라투라(nomen-

31) Bourdieu, Pierre,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p.16.

32) *Ibid.*, p.16.

33) *Ibid.*, p.16.

34) 보스렌스키 저, 차근호 외 역, 『노멘클라투라(상) - 소비에트의 붉은 귀족』(서울: 명문당, 1988), 215~220쪽; 배링턴 무어 저, 송복 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서울: 한국학술정보원, 2002), 108쪽.

< 표 1 > 북한사회의 '관계자본'들

구분	개념	북한 적용
상징자본	·의식, 명예, 위신이 상징적 효과로 사회적 관계구성에 영향을 주는 힘 ·통치자의 입장에서 '충성과 지지' 획득	·수령이 관료, 인민으로부터 충성과 지지 획득하는 상징적 힘 ·관료들에게 정치자본, 인민들에게 경제자본 분배하는 힘
정치자본	·정치적 특권을 이 지위를 통해 공적 자산과 서비스를 전유·활용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힘	·공공자산(공장·농장 생산물, 자재, 기타 재화)의 임의적 활용, 경제자본화 ·공적 서비스(배급, 의료, 교육, 주택 등)의 특수한 전유
관료자본	·통제·관리 권한을 가진 관료로부터 비공식적·사적·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묵인·허용 등을 받는 힘	·인민들이 생존차원의 사적 경제활동을 위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사적 활동을 묵인 받음. ·장터교환이나 생계활동을 통제하는 공권력의 묵인을 얻어내는 능력
경제자본	·'소유권' 형식으로 제도화된 재화·재산, 소득 등 모든 물질 자원 형태	·화폐나 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모든 물질 자원
문화자본	·'체화된', '객관화된', '제도화된' 문화적 조건과 혜택을 통해 형성, 기타 다른 자본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출신성분'에 따라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침. ·차별화된 교육혜택과 우수한 학력자본 획득에 기여
사회자본	·인면·인정 등을 통해 형성된 연결망 ·특정한 행위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동원되는 연결망의 규모	·공적 삶에서 다양한 자원과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조건 ·사적 삶에서 인간적 유대를 통한 공동체성 획득

klatura)들은 국가자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자본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신의 몫을 챙겼고, 체제 이행 이후에도 과거 정치자본을 통해 획득했던 다양한 정보와 인적 관계를 그들의 물질적 획득에 활용했다. 북한의 관료들 역시 1990년대 들어 이러한 정치자본의 경제자본화를 행하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새롭게 개념화하여 추가하는 '자본'은 '관료자본'이 있다. '관료자본(bureaucratic capital)'³⁵⁾은 제도적 규제와 관료

적 감시에 둘러싸인 인민들이 다양한 개인적 목적을 일상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관료들로부터 묵인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자본을 말한다. 비공식적으로는 생계 차원이든 개인적 이해 차원이든 일탈, 탈법, 비법적 행위로 간주되는 것들을 묵인 받는 것이고,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정해진 관료적 절차를 보다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관료자본은 북한주민들에게 일상적인 편의를 봐주는 관료적 묵인과 연줄, 정서 등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관료자본은 인민들이 생존 차원의 사적 경제활동을 위해 해당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상납 등을 하고 이를 통해 작업장 이탈과 사적 활동을 묵인 받거나, 장터교환이나 생계활동을 통제하는 공권력의 묵인을 얻어내는 자본의 의미가 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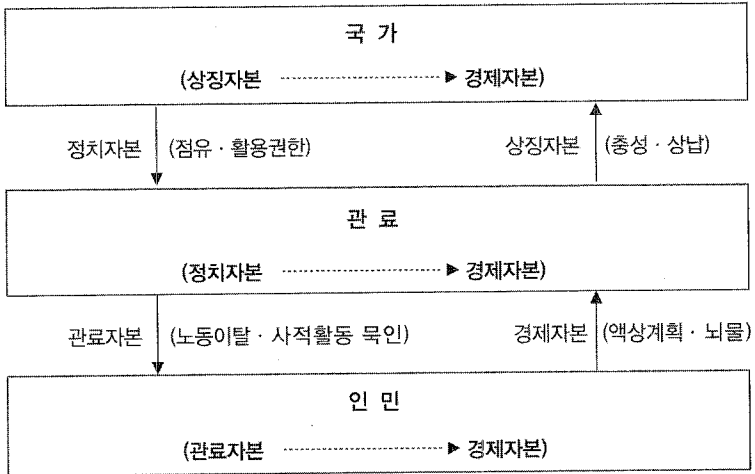
2) 1990년대 ‘관계자본’의 교환전략과 시장교환의 전유

위에서 설명한 ‘관계자본’들은 1990년대 북한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국가, 관료, 인민 사이에 ‘생존’을 화두로 상징자본, 정치자본, 관료자본, 경제자본 등을 교환하는 구도가 적극화된 것이다.³⁶⁾ 이들 자본들의 교환구조는 이 체제의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35) 부르디외 역시 ‘관료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는데, 즉 프랑스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관료들과 건설업자들의 담합을 설명하면서 관료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Bourdieu, Pierre, *The Social Structures of the Economy* (Cambridge: Polity Press, 2005), pp.116~117, 218.

36)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은 제외를 했다. 문화자본은 자본의 성격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특정한 사안이나 관계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그 배경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자본은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며, 국가, 관료, 인민 각 행위자들이 특정한 상황이나 현실에서 교환하는 자본의 성격을 명확하

<그림 1> 1990년대 국가-관료-인민 간의 '관계자본' 교환 구조



재생산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 이러한 자본의 교환 관계에 시장교환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자본의 유지에 경제자본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던 점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

국가-관료-인민 사이 형성된 '관계자본'의 교환관계는 <그림 1> 같다.³⁷⁾ 1990년대 들어와 두드러진 특징은 각각 자신이 가진 자본(상

계 드러내는 데는 모호성을 갖는다. 그러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은 1990년대 전후 북한의 변화된 사회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 개념을 사용해 북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제 범주와 개념의 추상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37) 각각의 관계자본들은 1990년대 전후로 일정한 성격변화가 있었다. 상징자본의 경우 과거에도 소수 특권화된 관료들의 상징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전민을 상대로 한 지지와 충성 역시 중요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정권 안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정·군의 관료들에 대한 특수한 이해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들의 상징자본이 역시 중요해졌다. 정치자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개인적 입신과 함께 계획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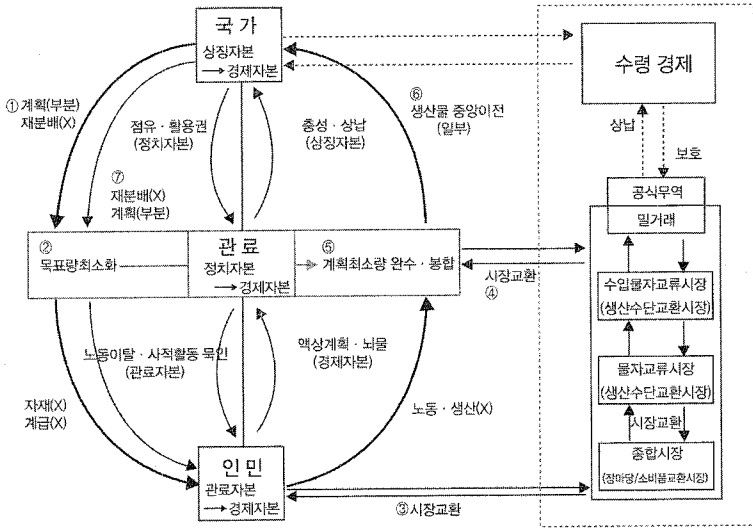
정자본-국가, 정치자본-관료, 관료자본-인민)을 통해 경제자본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과거 경제자본이 제한된 영역에서 특수한 이해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졌다면, 현재는 모든 층위와 단위에서 경제자본이 수단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로 주목해 볼 만하다. 여기서 관계자본은 각 층위의 개인과 집단이 갖는 현실적인 목표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과 설명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고지도자와 상층 엘리트 간에는 ‘수령경제’를 둘러싼 특수한 이해관계가 성립되었다. 최고지도자는 관료적 권한으로서 정치자본을 부여하고 관료들은 충성과 체제 보위라는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수령이 상징자본을 축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는 특수한 교환관계가 성립한다.³⁸⁾ 다음으로 중하위 관료들 역시 그들 상층의 관료들과 교환관계를 갖는다. 상층 관료들은 자신의 위계적 서열

정치자본이 많은 부분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자기단위와 기관의 생존, 관료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정치자본이 더욱 적극화되었다. 관료자본의 경우에도 과거 관료자본은 인민들 사이에서 입당, 보수, 성과, 편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1990년대에는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관료자본이 사활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경제자본의 경우에도 시장교환이 활성화되면서 생계수단 및 교환수단,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적극화되었다. 사회자본 역시 과거에는 입당이나 생활상 편의를 해결하는 인맥 관계를 의미했다면 1990년대는 생계활동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인간적 관계망으로 확장되었다. 문화자본 역시 과거에는 비교적 균등한 교육기회의 혜택이란 차원에서 소수 특권화된 계층만이 일반 주민들과 차별화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와서는 지위도 중요하지만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을 획득하고 향유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38) 수령과 상층엘리트 간의 충성자본과 정치자본 교환구조와 통치자금 조성 과정에서 성립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292~309쪽.

<그림 2>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계획-재분배 사이클과 ‘관계자본’의 흐름



내에서 충성을 하고 계획을 병합하고 금전적 상납을 하는 중하위 관료들에게 정치자본 및 정치적 연줄을 제공한다. 또 중하위 관료들에게 정치자본은 자신의 단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자본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와 수단이다.³⁹⁾ 이들은 시장교환의 각 중요 지점을 통제·관리하는 권한을 정치자본을 통해 행사한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과 자원을 상부에 상납하는 것으로 정치자본을 유지·확대하는 데서 교환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하위 관료들과 주민들 간의 교환관계이다. 배급과 생

39) 공적인 정치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자본을 획득하는 것과 권력의 수직적 위계에서 특혜와 보호를 통해 공생관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형중·이교덕·정장현·이기동,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205, 211~213쪽

필품 공급의 중단은 주민들을 ‘생존’을 위한 장터활동에 뛰어들게 했다. 중하위 관료들은 주민들의 노동이탈과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관리해야 했고, 주민들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사적 경제활동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환관계의 동기가 형성되었다.⁴⁰⁾ 주민들은 장터활동을 위해 뇌물과 대가를 지불하고 관료들은 이를 묵인하는 대가를 받는 관계이다. 이것은 장터로부터의 생계 차익(arbitrage) —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윤을 남기는 — 에 말단 관료들이 정치자본을 통해 기생하는 형태이다. 주민들이 묵인을 얻어낼 수 있는 관료자본과 이를 허용하는 관료들의 정치자본 사이에 경제자본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관료·주민 간에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이해관계를 교환하고 서로가 공존하는 게임의 규칙이 구성되었다. 총체적으로 시장교환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유지, 안정화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공모·담합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교환 관계가 경제관계의 중요한 매개 고리이자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시장교환이 기존의 수령, 관료, 인민 사이에 성립 하던 관계구도를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구도 내부로 전유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교환이 ‘생존’을 둘러싼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묻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기존의 계획-재분배체계가 가졌던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재분배체계가 규정해 왔던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는가이다. 그것은 계획-재분배체

40) 이러한 뇌물과 관료적 통제의 교환 및 공생관계에 대해서는,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서울: 통일연구원, 2004), 25~29쪽.

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관료, 인민이 어떠한 교환전략을 추구하는가와 교환의 내용물은 무엇인가이다. 이는 기존의 계획-재분배체계가 설정해 왔던 교환관계의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교환의 내용물, 즉 무엇이 이들의 교환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 되었는가에 대한 규명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 관료, 인민들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에서 시장교환이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시장교환이 이들의 관계자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이다. 국가, 관료, 인민들은 관계자본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다른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속에서 자신의 생존 현실에 대응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교환은 관계자본을 구축하고 축적하며, 활용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교환을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전유해 내는 것이다. 즉, 그들은 기존의 계획-재분배체계가 설정한 교환관계의 구도 속에서 시장교환을 생존에 필요한 만큼 전유해 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관계자본의 교환 속에서 국가, 관료, 인민이 공생하는 규칙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이다. 1990년대 이전 과거 관계자본의 교환은 계획-재분배체계를 중심으로 설정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형태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지배적 틀이었다. 여기에서 시장교환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리 크지 않았고 있다 해도 은폐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이들의 관계자본 교환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서 시장교환이 차지하는 위상은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해졌다. 일종의 그들 사이의 공생이 이루어지는 데서 시장교환이 중요한 수단이자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4. 결론

북한의 계획-재분배체계에는 물질적 재분배와 정치적 재분배, 그리고 국가의 도덕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질서들이 내장되어 있었다. 본 논문은 그것을 호혜, 재분배, 시장교환이라는 교환형태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수령과 관료, 인민의 관계는 배품과 보답이라는 호혜적 관계로 이데올로기화되어 왔다. 이런 호혜적 관계는 계획경제를 통한 물질적 자원의 집중과 독점적 재분배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집행하는 거대한 관료들에 대한 정치적 지위와 권한의 재분배를 역시 독점하는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장교환은 이러한 계획-재분배체계 내부의 물질적 순환의 불확실성을 봉합하는 수단으로 ‘은폐된’ 채 미미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계획-재분배체계를 통한 통합 메커니즘 내부에는 또 다른 교환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다. 수령, 관료, 인민 등의 각 행위자들이 호혜, 재분배, 시장 등의 교환질서를 자신의 생존논리에 맞게 재전유하면서 발달시킨 교환논리들이다. 계획-재분배체계가 구성하는 거시적 교환관계와 자신의 생존논리에 맞게 교환질서를 재전유해 내는 북한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담론, 전략, 실천 등이 맞물려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최고지도자를 포함 지도집단과 관료, 인민 등이 각각 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양한 의식과 전략 속에서 행위하며, 그것이 일정한 지배적 교환질서 속에서 사회적 관계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계획-재분배체계 내부에 은폐되어 있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교환질서 재전유와 사회적 관계를 ‘관계자본’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관계자본’은 계획-재분배체계가 규정하는 교환질서 내부에서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이다. 이들 자본은 개인이 고립된 속에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에 연루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획득된다는 점에서 ‘관계자본’이다. ‘관계자본’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일정한 관계자본 교환구조에 구속하는 한편 이들이 서로 공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시켜 왔다.

1990년대 총체적인 경제적 난관은 체제의 도덕적 지배를 정당화 하던 계획-재분배체계의 마비를 의미했고, 이와 맞물린 정치적 재분배 체계에도 위협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기존의 인민적 시혜와 노동을 통한 보답이라는 기본적인 도덕담론 구조가 위협받을 수 있는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도덕담론의 질서 속에서 위장되어 있던 사회 각 층위의 ‘생계윤리(subsistence ethic)’들이 경제난 속에서 현실적 생계논리로 적극화 되면서 개인의 생계활동을 정당화하는 도덕담론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계획-재분배체계를 기축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던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형태가 그 물질적 기초였던 계획-재분배 능력에 위기를 맞음에 따라 시장교환이 사회 곳곳에서 기존 교환질서를 유지시키는 물질적 수급의 수단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시장교환이 ‘관계자본’을 축적하고 교환하는 데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 관료, 인민들 사이에 시장교환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유지, 안정화하려는 공통된 목표가 성립되었고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공모·담합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교환 관계가 경제관계의 중요한 매개 고리이자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는 한편, 시장교환이 기존의 수령, 관료, 인민 사이에 성립하던 관계구도를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구도 내부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교환이 ‘생존’을 둘러싼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문혀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북한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교환의 형태와 행위자들의 담론, 전략, 실천이 교직되는 지점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11월 13일 / ■ 채택: 11월 25일

참고문헌

-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8).
- 서재진·조한범·장경섭·유팔무,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서울: 생각의나무, 1999).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서울: 통일연구원, 2004).
-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1998).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 권기돈 역, 『탐구2』(서울: 새물결, 1998).
- _____ 저, 송태욱 역, 『일본 정신의 기원 - 언어, 국가, 대외제, 그리고 통화』(서울: 이매진, 2003).
- _____ 저, 송태욱 역, 『트랜스크리티크: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서울: 한길사, 2005).
- _____ 저,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서울: 도서출판 b, 2006).
- 게오르그 짐멜 저, 김덕영 외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서울: 새물결, 2005).
- 나탈리 지몬 데이비스 저, 김복미 역, 『선물의 역사』(서울: 서해문집, 2004).
- 마르셀 모스 저, 이상률 역, 『증여론』(서울: 한길사, 2002).
-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서울: 해남, 2002).
- 박형중·이교덕·정창현·이기동,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배링턴 무어 저, 송복 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서울: 한국학술정보원, 2002).
- 베아트리스 데코사 저, 신은영 역, 『노동·교환·기술』(서울: 동문선, 1999).
- 보스웬스키 저, 차근호 외 역, 『노멘클라투라(상) - 소비에트의 붉은 귀족』(서울: 명문당, 1988).
-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서울: 정통출판, 2006).
- 피에르 부르디외·장 끌로드 파세롱 저, 이상호 역,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서울: 동문선, 2000).

- 칼 폴라니 저, 박현수 역,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서울: 민음사, 1991).
- 파트리스 보네워츠 저, 문경자 역, 『부르디외의 사회학 입문』(서울: 동문선, 2000).
- 한만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북한에서 살다 온 16인의 생생한 교육 체험기』(서울: 우리교육, 1999).
- 홍민, “북한체제의 ‘도덕경제’적 성격과 변화 동학,” 『진보평론』, 24호(2005년 여름).
- _____,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Bourdieu, Pierre, “The Form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1986).
- _____,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The Social Structures of the Economy* (Cambridge: Polity Press, 2005).
- Bourdieu, Pierre and Wacquant, Loic J. D.,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The Exchange Structure of ‘Relational Capital’ and Appropriation of Market Exchange in North Korea

Hong, Min(Dongguk Univ.)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nge and feature of North Korean social relations in the 1990s.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forms of social exchange in order to understand changes in social relations.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e social exchange order that operates within North Korea’s planned redistribution system. This system is composed of material redistribution, political redistribution and moral discussion.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planned redistribution system composes social relations and analyzes changes in these relations by applying the concept of ‘relational capital’.

Relational capital means the social resources of an individual for making a living, achieving success, earning a profit and maintaining connections. Social relations in North Korea have formed within an exchange structure of symbolic capital, political capital, bureaucratic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Since the 1990s, market exchanges in North Korea have taken on an important role in the exchange structure of relational capital because such exchanges became an important means of survival for officials, bureaucrats, and ordinary citizens. This represents an accommodation of market exchanges within the existing exchange structure of relational capital. In conclusion, market exchanges for the purpose of survival are becoming embedded in existing social relations.

Key Words: social relations, exchange forms, plan-redistribution system, reciprocity, redistribution, market exchange, relational capital re-appropriation

필자 약력(계재순)

흥민

현재 동국대학교 시간강사로 있으며,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를 졸업(2000)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라는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2006)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의 현지도와 경제운영: 계획경제와 ‘교시경제’의 변주곡”(2002), “북한 농촌마을에서의 국가-사회관계 변화: 1990년대 ‘군’에서의 도덕경제와 ‘일상의 정치’”(2004), “북한체제의 ‘도덕경제’적 성격과 변화 동학”(2005), “북한의 도덕담론 교환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동학”(2006),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2006) 등이 있다.